

#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 (2021~25)과 노동정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중국

박석진 (중국 칭화대학교 역사학 박사과정)

## ■ 머리말

중국 정부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장기 계획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1953년 이후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sup>1)</sup> 5개년 계획에서는 대략 국가의 중대 건설 프로젝트 계획, 생산 규모의 지역적 분포 및 중요한 국민경제의 비율 조정 등과 같은 국민경제 발전의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5개년 계획은 중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방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중국 사회와 경제의 전반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이후 변화의 방향도 예측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시행한 제14차 5개년 계획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發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綱要)’으로, 2021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 및 확정되었다.

1) 신중국이 설립된 1949년 10월~1952년 말까지의 국민경제 회복 시기와 1963~1965년까지의 국민경제 조정 시기에는 예외적으로 5개년 계획이 계획 및 시행되지 않았다. 5개년 계획은 처음에는 ‘5개년 계획(計劃)’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지만, 2006년부터 시작된 제11차부터 ‘5개년 계획(規劃)’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계획’이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제시된 것이라면, ‘계획’은 목표보다는 권고와 정책적 방향의 의미가 강하다.

## ■ 제14차 5개년 계획의 내용

이 요강의 내용은 총 19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각각 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 ② 혁신주도 개발의 지속 ③ 현대 산업체계 발전의 가속화 및 실물경제의 기초 강화 ④ 국내 시장 강화를 통한 새로운 발전기제 구축 ⑤ 디지털 개발 가속화 및 디지털 중국 건설 ⑥ 개혁의 전면적 심화 ⑦ 농어촌 우선발전 유지 및 농촌진흥사업의 전면적 추진 ⑧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및 신형 도시화 전략 추진 ⑨ 권역별 경제 발전 촉진 ⑩ 사회주의 선진문화 발전 및 국가의 소프트파워 강화 ⑪ 녹색경제 추진 ⑫ 대외개방 확대 ⑬ 국민소질 함양 ⑭ 민생 복지 증진 ⑮ 발전과 안보의 통합적 추진 ⑯ 국방 및 군대의 현대화를 가속화 ⑰ 사회주의 민주법치 강화 및 당과 국가의 감독 시스템 개선 ⑱ 일국양제(一國兩制)<sup>2)</sup> 유지 및 조국통일 추진 ⑲ 계획 실행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sup>

이 중에서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는 크게 여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제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획득한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의 진흥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전략적 과학 기술력을 강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고 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강화를 강조하며 국내 경제의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제 경제순환과 결합해 국내외 경제의 쌍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발전 패턴을 가급적 빨리 건설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수 확대 전략을 실시해 생산·분배·유통·소비가 더욱 국내 시장에 의존하도록 하고, 공급 체계의 내수시장 적합성을 높여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높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내수 확대를 위한 신형 도시화 계획<sup>4)</sup>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고

2) ‘일국양제’는 ‘한 국가 두 체제’라는 뜻으로,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체제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 본토와 홍콩 및 마카오의 관계에서 일국양제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3) 新華網(2021.3.12),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1lh/2021-03/13/c\\_1127205564.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1lh/2021-03/13/c_1127205564.htm)(최종검색일: 2021.3.25)

4) 이를 위해 호적제도 개혁, 공공서비스 강화 등으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가속화하고, 국가 주요 지역의 발전전략 이행을 가속화한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가급 경제발전 통합지구로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징진지(京津冀) 경제구역,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창장(長江) 삼각주 경제구역, 광저우·홍콩·마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웨강아오(粵港澳) 대만구(주장(珠江) 삼각주 경제구역) 등의 광역 도시권을

현대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사슬과 공급망 업그레이드,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발전 등을 제시했다. 내수 확대뿐만 아니라 대외개방 정책도 심화할 전망이다. 수출주도 전략으로 형성해 온 국제 시장과의 관계를 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해외자금의 유입 및 수입 확대 등으로 전환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대된 국내 시장과 긴밀하게 결합하려는 것이 쌍순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개혁개방의 새로운 단계를 연다. 이는 개혁개방의 심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으로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다. 재산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시장화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다양한 시장 주체들을 위해 공정한 시장화·법치화 및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를 건설한다.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셋째, 사회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공공문화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요 문화와 자연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국가급 문화공원을 여러 곳에 조성한다. 그리고 신형 문화기업, 문화 관련 업종 및 문화 소비 모델을 개발하고 고품질 문화상품의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중국 전통 고사(故事)의 국제화를 추구하면서 대외 문화교류와 다층적인 문명 간 대화를 넓혀 중국 문화의 소프트파워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넷째, 생태문명 건설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도약한다. 국토공간 규획과 용도의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고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더욱 강화된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다섯째, 새로운 수준의 복지를 실현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증가, 고용안정 및 확대, 공공 서비스 시스템 개선, 빈곤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소득 증가와 관련해 1차 분배에서 노동보수<sup>5)</sup>의 비중을 높이고 임금인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중 소득층을 확대한다. 토지, 자본 등의 사용권과 수익권을 통한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모색하고,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재산 소득을 증가시킨다. 또한 조세, 사회보험 등의 역할을 강화

지정 및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5) 노동보수에는 임금에 더해 사회보험, 기업으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 등이 포함된다.

해 재분배 체계를 개선한다. 고용안정 및 확대를 위해서는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도록 장려하고 다양한 채널의 유연한 취업을 확대하며, 구조적 취업문제를 해결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공공서비스 시스템 개선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평균 수준을 개선하고 전체 국민의 교육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며 다층적인 사회보장체계와 위생건강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체계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도록 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개선하게 했다. 또한 국가의 공공위생 보호망을 튼튼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전방위적이고 전주기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리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빈곤 정책과 농촌진흥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농촌 저소득층과 저개발 지역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빈곤으로의 회귀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탈빈곤을 위한 후속 지원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국가의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한다. 2035년까지 국가 거버넌스 체계 및 능력의 현대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관리체계 개혁을 심화하고 직책이 분명하고 법치 행정이 명확한 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가속화해 부국과 강군의 통일을 실현하도록 한다.<sup>6)</sup>

이상의 목표 중에서도 특히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이 가장 핵심적인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sup>7)</sup>

## ■ 제14차 5개년 규획과 노동시장의 변화

제14차 5개년 규획 시기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먼저 중국 국무부 산하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고용창업연구실 장

6) 人民網(2020.12.4), 「“十四五”時期經濟社會發展主要目標(學習貫徹黨的十九屆五中全會精神)」, <http://ip.people.com.cn/n1/2020/1204/c136655-31954879.html>(최종검색일: 2021.3.25); 中國共產黨新聞網(2021.1.18), 「如何理解“十四五”時期經濟社會發展主要目標? 人民日報理論解讀來了」, <http://theory.people.com.cn/n1/2021/0118/c40531-32002472.html>(최종검색일: 2021.3.25)

7) 中國財經(2021.2.25), 「開局“十四五”聚集中國經濟三大關鍵詞: 擴大內需 不急轉彎 科技創新」, <http://finance.china.com.cn/news/special/lianghui2021/20210225/5504600.shtml>(최종검색일: 2021.3.25)

리빈(張麗賓) 주임은 현재 중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중국의 노동시장에는 다수의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오래된 문제들로는 △ 노동시장의 범주와 개념, 발전 방향 등에 관련한 이론적 문제 △ 각 주체별로 분산된 노동시장의 통일 △ 노동시장 내 각종 차별문제와 높은 구직비용 문제 △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불편함 등이 있다. 그리고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문제들로는 △ 경기침체와 중미 무역 마찰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 인건비 상승과 혁신 부족으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 △ 중국에서 장기간 존재해 온 재정금융 리스크 등이 있다.

둘째, 기술발달은 고용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를 고용의 수요 및 공급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 기술발달로 인한 생산 효율성 향상과 그 결과로서 소득 격차 확대 △ 기술발달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문제 발생 △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이 야기하는 노동자 권익 보장에 대한 도전 △ 노동력 수요의 지역적 차이 확대 등이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 전체 노동력의 감소와 노동 참여율 하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 발생 △ 학교에서 배출하는 인재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불일치 △ 노동 방식의 변화에 영향받는 노동자의 휴식과 여가문제 등이 있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저소득층과 불안정 고용 집단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소득분배의 구조적 난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중국은 중산층 및 고소득층이 증가하는 동시에 도시 저소득 빈곤층도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리빈 주임은 교육개혁이 노동시장의 자원배분을 향상시킬 중요한 출발점임을 제시했다. 현재 중국의 교육제도하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중국의 교육제도는 성인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 학생에 대한 요구 수준이 과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제도를 모든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미래와 노동 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의 교육제도는 일반교육에 치중되어 있어서 직업교육이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자원 배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급별 전문 체계를 구축하고 직책마다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sup>8)</sup>

8) 搜狐(2019.11.22), 「政策簡報[“十四五”期間勞動力市場的主要問題和應對措施]」, <https://www.sohu.com>.

한편,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인구구조와 경제구조 방면에서 모두 빠른 변화가 예상되므로 노동력의 공급 및 수요 측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는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중도(中度) 고령화’<sup>9)</sup>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노동력 공급의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외부 충격이 중국의 고용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정부는 노동력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노동력 공급의 상대적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 총수요 및 총공급을 살펴보면, 수요 면에서는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총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및노동경제연구소는 중국의 총노동력 수요가 2019년 7억 7,500만 명에서 2025년에는 7억 8천만~7억 8,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공급 면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총공급이 2019년 7억 5,600만 명에서 2025년에는 7억 2,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여, 수요·공급 간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증가하여 총고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도 노동 공급의 유연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임금 인상으로 도시 노동력 공급을 증가시키던 시스템은 이미 크게 약화되었다. 향후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sup>10)</sup>

이 외에도 고용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선 기술발달과 일자리의 관계이다. 기술발달로 인한 로봇의 보급은 의외로 강력한 ‘고용 파괴’ 효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및노동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인구와 노동 그린북: 중국 인구와 노동 문제 보고 No. 20」에 의하면, 로봇의 보급은 중국 제조업 공정의 19.6%만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고속런 일자리 및 로봇과의 협업 일자리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오히려 문제는 기술발달로 인한 임금 격차이다. 비정규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고용방식과 노

com/a/355379991\_345245(최종검색일: 2021.3.25)

9) 60세 이상의 인구 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면 ‘중도 고령화’ 사회로 정의한다.

10) 中工網(2021.1.25), 「十四五時期高質量就業, 需要邁過幾道坎」, <http://job.worker.cn/34168/202101/25/210125134802390.shtml>(최종검색일: 2021.3.25)

사관계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도 문제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및노동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중국 도시 노동력 조사(CULS)」 결과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 고용 비중은 전체 고용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렇게 증가한 비정규 고용에는 아직 노사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예를 들면,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피고용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은 제도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다. 또 지역에 따른 고용환경의 차이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동부 지역과 달리 중서부 및 동북 지역은 실업률이 7%를 넘기도 하고, 자원 고갈, 단일한 산업구조, 고용 기회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도시 지역의 노동 참여율은 55% 이하로 하락하기도 했다.<sup>11)</sup>

## ■ 제14차 5개년 계획과 노사관계 정책

명취안(孟泉) 외(2020)<sup>12)</sup>는 제13차 5개년 계획 시기의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노사관계 정책은 이전의 소통 혹은 차단에서 2010년부터 조정과 예방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어 왔다. 그 결과 현재는 중재, 소송 전 사전조정, 인민조정제도<sup>13)</sup>를 중심으로 하는 조정체계와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단체협상제도가 노사관계 정책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지방정부는 기업에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지방 경제발전을 위한 소프트파워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재 및 소송과 같은 기존의 방식은 이미 현실적으로 노사분쟁에서의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정 업무는 더욱 전문화되어야 하고 중립적인 제3자가 보충적

11) 中工網(2021.1.25), 앞의 자료.

12) 孟泉·雷曉天(2020), 「“十四五”时期我国劳动关系治理的发展方向与策略选择」, 『中国人力资源开发』, 37(12).

13) 인민조정제도는 중국 사법제도 중 일종의 보조적 제도로서 분쟁 발생 시 국가의 개입 없이 인민조정 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제도이다.

으로 조정에 개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적인 사전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단체협상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기업 노사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 간에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분쟁 예방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13차 5개년 계획 시기 때 중앙 정부가 대중단체(群團組織)<sup>14)</sup> 개혁<sup>15)</sup>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역시 개혁 방안을 모색했는데, 노동조합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합법 기관으로서 노사관계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중국의 노동조합은 주도적으로 단체협상과 노사협력, 노사 간 소통 등을 이끌어 노사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특색을 갖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개혁의 동기와 체계 및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지역화, 분산화, 수동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집단적 노사분쟁이 없고 국가가 노동정책과 노사관계를 강력하게 주도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단체 개혁 방향에 적절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플랫폼 경제의 비정규 고용 모델은 이미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중요시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가 출현하면서 중국의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다. 기존의 노동시장은 고용형태에 있어 전통적으로 제조업 정규직 위주였지만 플랫폼 경제가 출현하면서 비정규 고용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플랫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문제, 직업능력개발 문제, 노사분쟁 해결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sup>16)</sup>

14) '대중단체'는 일종의 사회단체를 의미하는데, 그중에서도 중앙기구편제위원회(中央機構編制委員會)에서 관리하는 대중단체로는 중화전국총공회(노동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중화전국여성연합회 등 22개 조직이 있다.

15)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15년 7월 「당의 대중단체 사업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중공 중앙 의견」을 발표했고, 이에 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 시기인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단체 개혁을 추진했다. 이 의견은 11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중국 공산당위원회의 대중단체 사업에 대한 조직적 지도 강화 △ 당과 정부의 중심 사업에 대한 대중단체의 대중 동원 강화 △ 대중단체의 대민 서비스 활동 활성화 및 대중의 합법적 권익옹호 사업 강화 △ 대중단체의 새로운 사회적 거버넌스 참여 및 사회안정 추구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6) 中工網(2021.1.25), 앞의 자료.

이 외에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회법연구실의 왕톈위(王天玉) 부주임은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노사관계 정책의 핵심을 근로계약 체결률 제고에서 임금소득 분배제도 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제조업과 국유기업에서의 조화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한 차원 높여야 한다. 셋째,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노동권의 보장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노사관계 관련 법치화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sup>17)</sup>

## ■ 맺음말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국가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국가 정책이다. 제14차 5개년 계획 역시 현시기 중국의 경제와 사회 전반이 나아갈 방향을 폭넓게 설정하고 있는데, 그중 핵심은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확대를 통해 국내 및 국제 경제의 대순환을 쌍순환으로 연결함으로써 이후 중국 경제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이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정책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노동시장에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데다가 작업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인해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문제에 대응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2월 말에는 북경 지역에서 노동 권익옹호 활동을 하던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자조모임 대표가 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sup>18)</sup> 플랫폼 경제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고용환경은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듯하

17) 中國法學網(2020.11.7), 「全力構建中國特色和諧勞動關係」, [http://iolaw.cssn.cn/zxzp/202011/t20201109\\_5213130.shtml](http://iolaw.cssn.cn/zxzp/202011/t20201109_5213130.shtml)(최종검색일: 2021.3.25)

18) 中國勞工通訊(2021.3.2), 「組織互助平台表達騎手不滿 外賣騎手盟主被捕」, <https://clb.org.hk/zh-hans/content/%E3%80%90%E6%8C%81%E7%BB%AD%E6%9B%B4%E6%96%B0%E3%80%91%E7%BB%84%E7%BB%87%E4%BA%92%E5%8A%A9%E5%B9%B3%E5%8F%B0%E8%A1%A8%E8%BE%BE%E9%AA%91%E6%89%8B%E4%B8%8D%E6%BB%A1-%E5%A4%96%E5%>

다.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한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의 노동 정책 과제에 이러한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중국 사회가 향후 5년 동안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KLI**

8D%96%E9%AA%91%E6%89%8B%E7%9B%9F%E4%B8%BB%E8%A2%AB%E6%8D%95; 創投網(2021.3.2), 「餓了麼涉嫌變相降低騎手過年獎勵 相關人士: 騎手盟主被抓」, <http://www.xunjk.com/xinwen/gongsi/2021/0302/134352.html>(최종검색일: 2021.4.1)